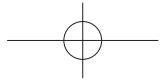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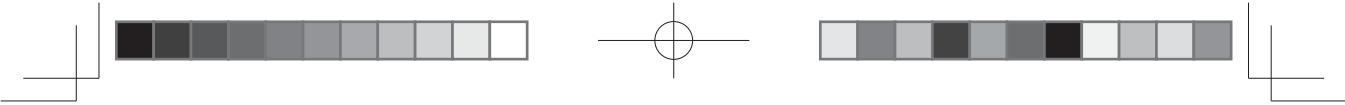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초|근 한국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국제정치이론은 21세기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풀어갈 이론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은 주로 행위자의 속성이나 행태에 주목하여 '중견국 자격(middlepowerhood)'이나 '중견국 기질(middlepowermanship)'을 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이러한 접근은 네트워크의 시대로 불리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복합적인 외교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전략을 논하기에는 너무 정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소셜 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 조직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동태적인 중견국 외교론을 풀어 나가기 위한 이론적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글이 새로이 던지는 핵심은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이다. 21세기 한국이 추구할 중견국 외교는 냉전기나 탈냉전기에 등장했던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제1세대(또는 제1.5세대) 중견국들이나 브릭스(BRICS) 국가들, 그중에서도 브라질, 남아공, 인도 등과 같은 제2세대 중견국들의 외교와는 다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이 던지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세 가지 이론적 논제는 1) 복합 지정학의 시각에서 보는 구조적 공백 찾기, 2) 열린 정체성과 국익론 및 국가모델의 모색, 3) 네트워크 권력개입의 복합적 추구이다. 이렇게 제시된 이론적 논제들은 평화외교, 경제협력, 지식질서, 공공외교 등의 이슈 영역에서 관찰되는 중견국 외교의 다양한 사례들을 탐구한, 이 책의 11개 장이 활용한 이론적 분석들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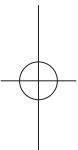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I.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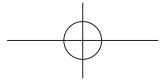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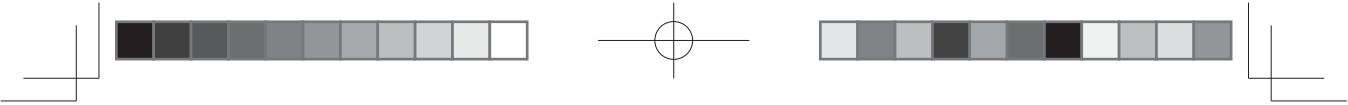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최근 중견국(**中堅國**, middle power)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력과 외교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한창이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군사력과 경제력 분야에서 이룩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10~15위권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6월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한 나라들의 대열인 소위 '20~50클럽'에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진입하여 개도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국가 브랜드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이자 '유학 가는 나라에서 유학 오는 나라'로서 이미지를 세워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터넷 분야에서 이룩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이나 TV 드라마와 K-팝을 앞세운, 소위 한류(韓流) 열풍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엿보게 하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덩치가 커진 국력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외교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개발원조총회,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2013년 서울 사이버공간총회, 그리고 2014년 부산 ITU전권회의 등과 같은 국제회의 개최가 중견국 외교의 대표적 성과로 거론되곤 한다. 이 밖에도 한국은 2013~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9월부터는 1년 동안 최근 출범한 정부협력체인 믹타(MIKTA)의 간사국을 맡게 되었다. 또한 2015년 10월에는 보건 안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고위급회의(SOM)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야 말로 2010년대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정치 분야에서 중견국이라고 하면 보통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들을 떠올린다.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주로 특정한 패턴의 행태를 보이는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나라들의 외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른 바 ‘제1세대 중견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들 나라들은 냉전 및 탈냉전 시기 미·소 양극체제와 미국의 패권 쇠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타진했다. 규범외교의 성향을 보이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중견국 외교는 캐나다, 호주와는 다소 맥을 달리하지만 그렇다고 이들과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제1.5세대 중견국’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 외교의 장에서 새로이 부상한 브릭스(BRICS) 국가들, 그중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뺀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과 같은 입사(IBSA) 국가들도 중견국 외교를 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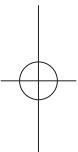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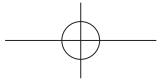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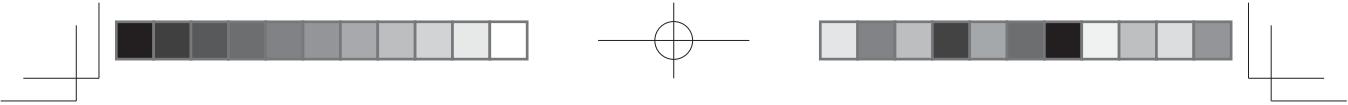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치는 나라들로 주목을 받았다. ‘제2세대 중견국’으로 부를 수 있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들이 주를 이루던 구미 전통의 중견국 그룹과는 구별된다(Jordaan 2003). 이들 국가들은 권위주의적 국내체제를 지닌 지역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국제적 쟁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흥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구분을 해보면, 한국은 종전의 그룹들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세대에 속하는 중견국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중견국의 국력을 갖추게 된 한국이 당면한 세계정치의 환경이 1980~90년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한다.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는 글로벌 문제들은 소수 강대국들이나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들만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복잡해졌다. 전통적인 군사안보나 정치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초국적 난제들이 세계 정치의 복잡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견그룹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까지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 중국의 부상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복합적인 양상은 미래의 세계정치가 20세기에 경험했던 국제정치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짐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10년대에 들어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거론되는 상황은 이전의 중견국들이 겪었던 국제정치 환경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세계정치의 변환을 바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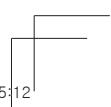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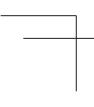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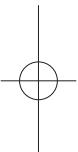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그럼에도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변환의 시대를 맞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를 가늠할 정도로 충분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과 같은 국가들의 외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용되었던 이론의 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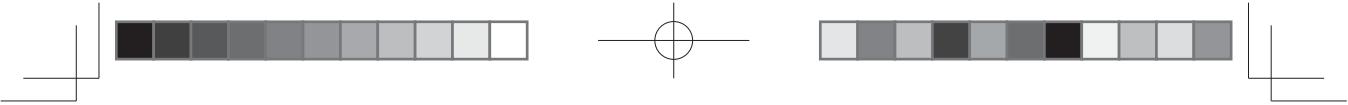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그대로 적용해서는 한국이 당면한 중견국 외교의 과제를 제대로 가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제1세대(또는 제1.5세대)와 제2세대 중견국들이 처해 있던 세계정치의 환경이 다르고 실천적 문제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이론적 플랫폼 위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새로운 중견국 외교론을 펼치는 문제는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담론적 실천의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본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을 제시하기 위해 쓰였는데,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딛고 선 이론적 전제들을 소개하는 목적을 겸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II절에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세계체제론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속성론과 행태론 및 단순 구조론을 넘어서는 중견국 외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III절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이론, 네트워크 조직 이론,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으로 대별되는 기존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의 구조-국가-권력의 논의에 원용하여 새로운 중견국 외교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IV절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여 이 책에서 새로이 개발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에 적용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내용을 복합 지정학으로 보는 구조적 공백 찾기, 열린 정체성과 국익론 및 국가모델의 모색,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복합적 추구 등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끝으로 V절에서는 이 책에 담긴 글들의 내용을 요약·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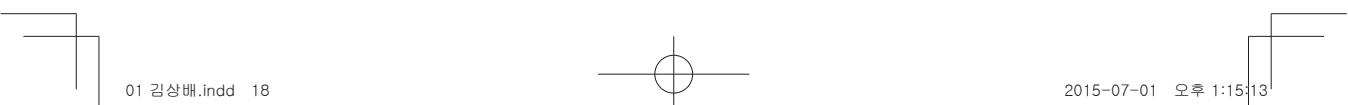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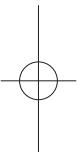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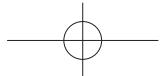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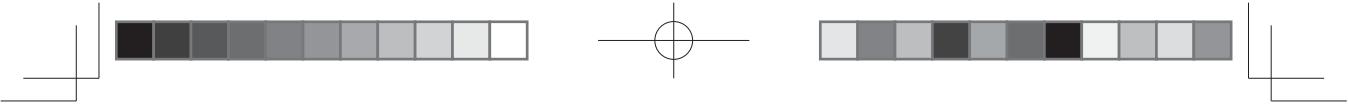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II. 국제정치이론과 중견국 외교론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중견국 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이론의 주류를 이루는 현실주의 시각에서 중견국을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진행된 이론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현실주의의 기본적 관심사가 강대국의 외교적 행태와 그 결과인 강대국 국제질서의 이론화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20세기 중후반에 이루어진 중견국 외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외교정책론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학자들의 관심은 중견국 외교에 대한 일반이론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그 능력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강대국도 아니고 약소국도 아닌 나라들의 외교적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 학자들의 논의는 암묵적으로 현실주의 시각의 국력 개념에 의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이다. 현실주의 국력론의 시각에서 본 중견국이란 물질적 능력(인구, 영토, 군사력, 경제력 등)을 잣대로 해서 볼 때 중간 규모인 나라였다.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국력의 지표를 충족시킨 국가들이 '중견국 자격(middlepowerhood)'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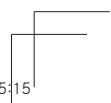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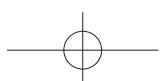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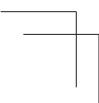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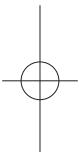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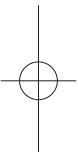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론은 오히려 세력전이론(Organski and Kugler 1980; Gilpin 1981)이나 정치리더십의 장주기론(Modelski 1978; Rapkin and Thompson 2003)에서 찾을 수 있다. 세력전이론과 장주기론은 모두 강대국의 부상과 쇠퇴로 나타나는 패권구조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러한 패권구조의 변화에서 여타 비(非)강대국은 큰 변수가 아니다. 그러나 패권국과 경합하는 도전국의 존재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에서도 도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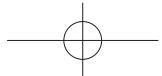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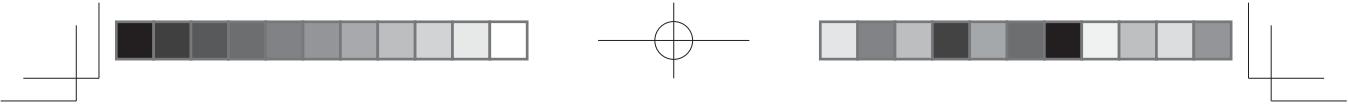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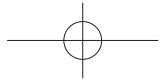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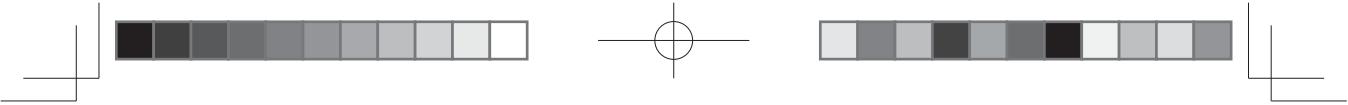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또는 소위 이등국가의 외교 전략은 주요 관심사였는데, 실제로 독일 (Holbraad 1971; Otte 2000)이나 일본(Cox 1989)에 관심이 기울여졌다. 사실 이러한 이등국가론은 구조론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중견국 외교론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Williams *et al.* 2012; Cooper 2011). 국제정치의 위계질서에서 1층위의 패권국에 도전하는 2층위 국가의 외교 전략이 그 국가가 차지하는, 3층위의 약소국과는 다른, 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밀하는 구조는, 이 글에서 강조하는 ‘유동적 관계구조’의 개념과는 달리, ‘고정적 위계구조’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중견국 외교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 시각을 취하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일찌감치 자유주의 시각의 국제정치이론은 강대국들이 형성한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을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룹이나 동맹을 형성하거나 지역기구와 국제기구를 통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system-affecting), 약소국이 아닌 국가, 즉 중견국의 범주를 설정하였다(Keohane 1969). 자유주의 시각은 주로 ‘중견국 기질(middlepowermanship)’이라고 불리는, 외교 문제에 대처하는 내재적 기질 또는 국제분쟁의 다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행태적 경향에 의거해서 중견국을 이해했다 (Holmes 1966; Nossal 2010; Cox 1989). 이러한 논의는 이 글에서 제1 세대 중견국으로 구분한 캐나다와 호주의 외교 전략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Cooper *et al.* 1993; Cooper ed. 1997; Ungerer 2007; Ravenhill 1998; Gordon 1966; McLin 1967). 자유주의 시각의 논의는 주로 속성론 또는 행태론적 접근을 했지만 중견국 ‘구조론’의 단초도 있었는데, 그것은 국제정치의 구조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하는 나라들, 즉 동지국가(同志國家, like-minded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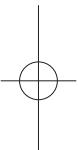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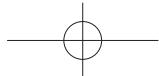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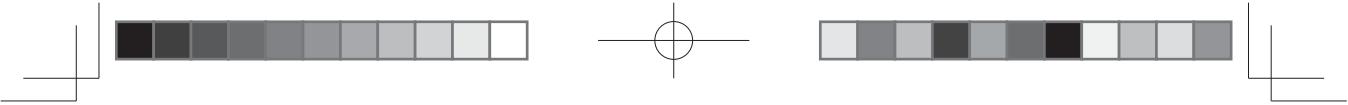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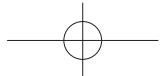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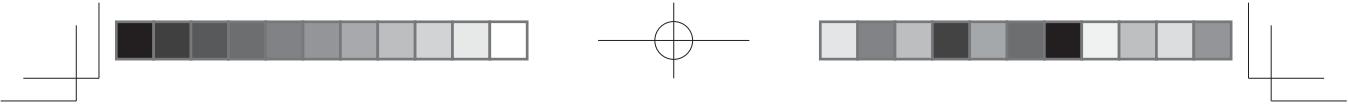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개념적 범주이지만 이는 단순계 발상에 기반을 둔 위계질서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다. 그럼에도 반주변부의 개념은 쇠퇴하는 중심부 국가와 상승하는 주변부 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떠올릴 수 있는 중견국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주변주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소위 비동맹운동 진영의 국가들이 냉전기 동서 진영의 중간지대에서 공동의 외교전선을 구축하거나, 탈냉전기 브릭스와 같은 국가 그룹이 선진국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대항전선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었다. 한편 세계체제론이 제시하는 반주변부의 국가 성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내체제를 지닌 제1세대나 제1.5세대 중견국과 달리 권위주의적 국내체제 또는 민주화 과정의 국내체제를 지닌 제2세대 중견국의 사례들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은 대체적으로 행위자의 능력, 행태, 정체성 등과 같은 속성론의 변수에 주목하여 중견국의 역할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중견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속성론은 중요하고, 그러한 속성론의 요건을 충족한 나라들이 특정한 행태의 중견국 외교를 펼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기반의 속성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견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론의 발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구조를 세력전이론이나 세

1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라도 브릭스(BRICS)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Ruvalcaba 2013). 특히 2006년도에 나온 *International Affairs*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이 유용하다(Hurrell 2006; Soares de Lima and Hirst 2006; Macfarlane 2006; Narlikar 2006; Foot 2006). 입사(IBSA)에 대해서는 Alden and Vieira(2005)와 Flemes(2007)를 참조하라. 비동맹운동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Strydom(2007)를 보라. 그 밖에 브라질과 멕시코(Selcher ed. 1981; Mares 1988).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Ping 2005), 남아공(Serrão and Bischoff 2009) 등의 외교 전략에 대한 연구들도 제2세대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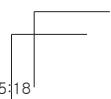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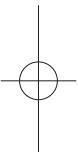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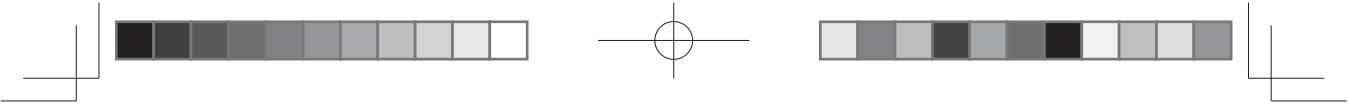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는 것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되는 종류의 개념이 아니라는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사실 어느 시점과 각도에서 관찰하느냐가 네트워크의 개념을 이해하는 변수가 된다. 다시 말해 분석적 층위를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존재는 유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이 글은 국제정치학에 주는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을 구조, 행위자, 과정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세 가지 진영으로 대별하였다.³

첫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구조(structure)로 보는 이론이다. “중견국 외교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국가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할 경우, 여기서 네트워크란 노드로서의 중견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구조이다.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행동하는 단위로서 노드들의 활동조건들이 달라진다. 네트워크는 노드들의 활동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노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이다. 소셜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은 네트워크를 일종의 구조로 보고 그 특징을 밝히거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은 구조로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국제정치학 분야에서도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actor)로 보는 이론이다. “최근 출범한 중견국 정부협의체인 믹타(MIKTA)는 최근 한국이 리더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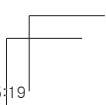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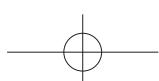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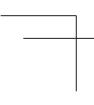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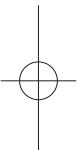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3 이 글에서 원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과 그 국제정치학적 원용에 대한 논의는 주로 김상배(2014)의 제1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존하였다. 짧은 지면에 요약·소개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과 관련된 자세한 문헌인용은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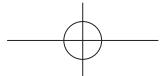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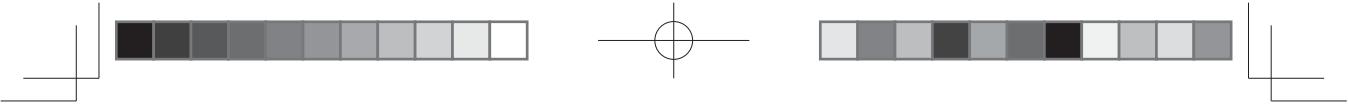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발휘하고 있는 중견국 네트워크이다”라고 말할 경우, 여기서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이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속성, 즉 위계 조직 모델도 아니고 경쟁 시장모델도 아닌 속성을 지닌 주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이다. 노드라는 단위 차원보다는 한 차원 위에서 노드와 노드,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링크 전체를 모아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네트워크를 본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는 이론 진영의 대표격은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의 조직 이론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 조직 이론(network organization theory)이다. 이들 이론의 전제는, 네트워크 형태의 사회조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였지만,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좀 더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네트워크를 하나의 동태적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라고 말할 경우, 여기서 네트워크란 어느 노드가 그 주위의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부단한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과정으로 파악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행위자와 구조로 구분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드들 서로의 관계를 맺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자기조직화’의 과정이다. 과학기술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원용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이러한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ANT에 의하면 과정으로서 네트워크는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물질적 환경에 해당하는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까지도 참여하는 과정, 즉 ANT의 용어로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이다. ANT에서 행위자란 노드와 같이 개체론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행위자는 아니고, 오히려 행위자와 구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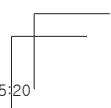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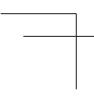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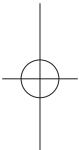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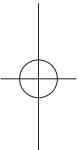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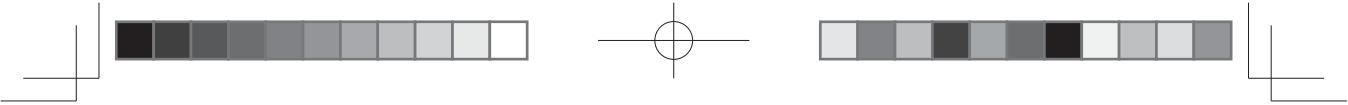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상호작용하면서 구성하는,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인 존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자이자 구조이면서 동시에 과정인 복합적인 존재로서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시각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에 맞게 기존 국제정치이론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정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은 주로 노드의 관점(또는 구조 일변도의 관점)에서 이론화를 전개하고 있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편향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데 기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네트워크 이론은 기존의 주류 국제정치이론(특히 신현실주의)에서 주로 강대국 외교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던 주요 논제들, 예를 들어 구조, 국가, 권력 등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다.⁴

첫째,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구조의 개념은 신현실주의의 고정적 구조 개념을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하는 국제체계에서 국가들 간의 힘의 분포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말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구조를 이렇게 거시적 구조로만 보는 것은 제한적이다. 자원권력 게임의 양상을 넘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신현실주의가 말하는 세력분포로서의 '구조'나 세계체제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같은 지정학적 구조라는 관점에서만 '구조'를 이해할 수는 없다.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국가 행위자들이 다양

4 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실에 적용한 사례로는 Hafner-Burton, Kahler and Montgomery(2009), Kahler ed.(2009), Maoz(2010), Nexon(2009), Goddard(2009) 등을 참조하라. 주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한 미국 학계의 시각과 달리 이 글에서 제시한 세 가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복합적으로 원용하여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을 모색한 사례로는 김상배(2014)를 보라. 이 글에서 소개하는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에 대한 논의는 김상배(2014) 제2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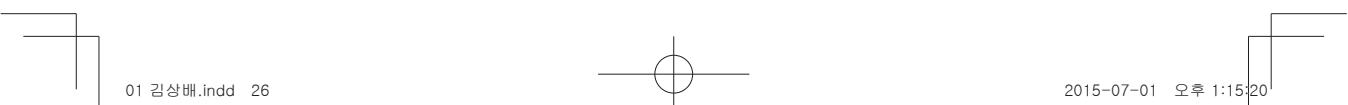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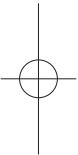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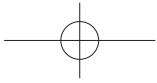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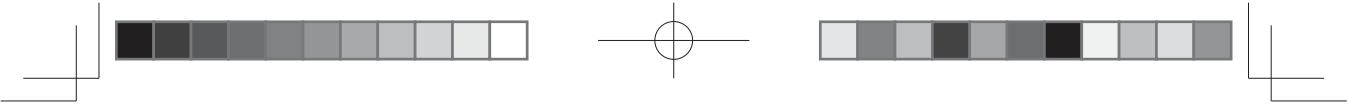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한 이슈 영역에서 기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하는 관계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셜 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도(relational configuration) 또는 상호작용 자체의 패턴으로서 개념화된다.

둘째, 네트워크 조직 이론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행위자의 개념은 국민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주권과 영토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하는 국민국가를 주요 행위자로서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은,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국민국가가 그 경계의 안과 밖으로 변환되면서, 그 역할과 형태가 변화하는 새로운 행위자로서 국가의 부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또한 국가 그 자체도 더 이상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위계조직이 아니며, 국가기구 내 여러 하위 행위자들의 수평적 관계가 활발해지는 조직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시각에서 주목하는 국가는 '네트워크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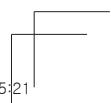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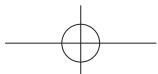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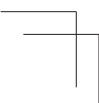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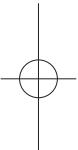
끝으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제시하는 네트워크 전략은 자원권력의 추구를 기본적인 전략 게임으로 보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전제를 수정·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현실주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 개념은 주로 국제정치의 핵심 노드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부국강병을 보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변화하는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권력 개념은 행위자의 속성론이나 자원론의 관점에서 파악되기도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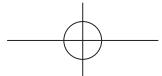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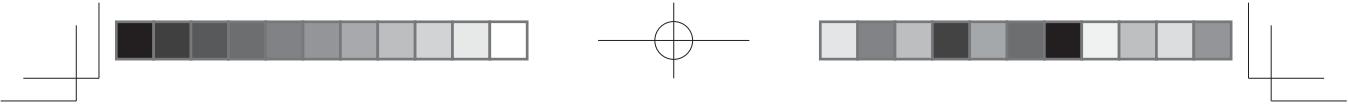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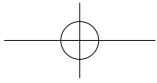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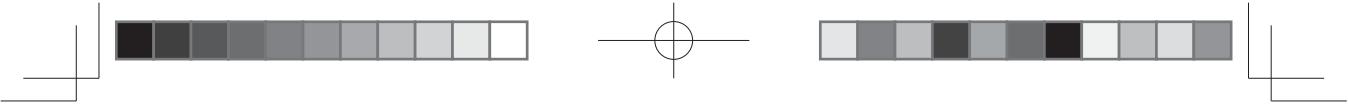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안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주목하는 권력은 노드로서의 국가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비롯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관계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생성되는 ‘네트워크 권력’이다.

이렇게 수정·보완된 구조와 국가 및 권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근대 국제정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변환을 겪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국제정치이론은 근대 국민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부국강병 게임, 즉 자원권력 게임의 ‘국가 간 정치(international politics)’로서 국제정치(國際政治)를 분석했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한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The 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NTWP)’은 오늘날 네트워크 관계구도하에서 네트워크 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권력 게임, 즉 네트워크 간의 정치(inter-network politics)로서 망제정치(網際政治)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볼 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된 네트워크 이론의 논의는 노드의 발상(즉 속성과 행태)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가하고 좀 더 복합적인 구조하에서 동태적인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하는 중견국의 실천적 고민을 푸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은 구조와 행위자 및 전략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중견국 외교를 이해하려는 이 글의 목적에 부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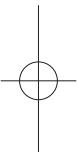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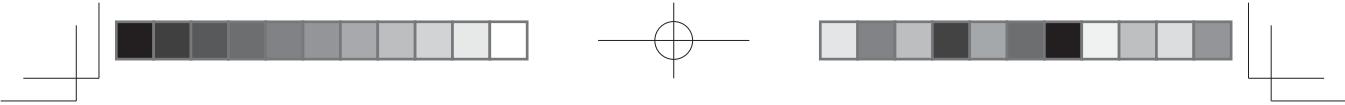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야 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자격요건을 평가하는 데는 유용하다. 적어도 1980~90년대의 국제정치에서 제1세대와 제2세대의 중견국 그룹을 분별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통했다. 그러나 이렇게 행위자의 속성에 주목하는 시각이, 행위자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의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중견국 외교를 논하는 데에도 여전히 유용할까?

속성론에만 의거해서는 중견국의 후보군을 추려낼 수는 있어도 그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어떤 조건에서 중견국 외교로 개념화할 수 있는 역할이 작동하는지, 또는 특정 국가가 비슷한 국력 크기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존 연구들이 행위자에 기반을 둔 발상(즉 속성이라는 변수)을 고수하다 보니까 중견국 외교가 실제로 투영되는 구조적 환경에 대한 입체적 고려를 놓치기 때문에 생긴다. 변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중견국 외교의 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속성 이외에도 시스템의 구조적 속성에도 눈을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가 중견국으로서 활동할 외교적 기회는, 그 국가가 지닌 행위자로서의 속성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중견국 외교가 펼쳐지는 시스템의 구조적 속성과 거기에서 부여되는 그 국가의 구조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21세기의 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출현하는 제3세대 중견국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또는 노드)의 성격을 넘어서 관계와 구조의 맥락에서 중견국을 보는 ‘구조적 위치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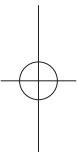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 말하는 구조는 신현실주의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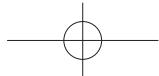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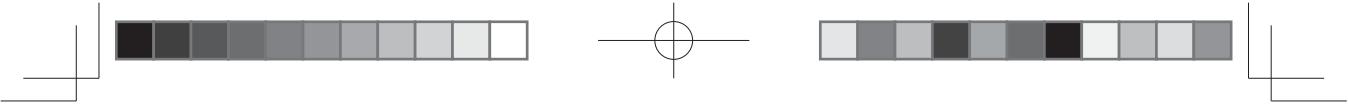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정치이론에서 말하는 세력분포로서의 ‘구조’나 세계체제론이 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와 같은 지정학적 구조는 아니다. 네트워크 시각에서 말하는 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도 또는 상호작용 자체의 패턴으로서 구조이다. 다시 말해 이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탈(脫)지정학적 구조이다. 이러한 관계구도론의 시각을 국제 정치학에 도입하면, 구조의 개념을 단위 차원으로 환원하지 않고 행위자들 간의 관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동태적인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는 행위자들의 내재적 자원이나 속성으로 환원되는 일종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행위자들 간의 또는 행위자들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관계로서 개념화된다. 이러한 구조의 개념은 신현실주의의 거시적 구조 개념에 비해서 중범위 시각에서 파악된 것이다. 최근 네트워크 연구에서 이러한 중범위 구조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제정치 분야의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국제기구의 멤버십 네트워크, 국가 행위자들 간의 동맹 네트워크, 국제 무기이전 네트워크, 국제금융과 무역의 네트워크, 다양한 산업 분야의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 유학생들의 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의 개념은 전통 지정학에서 말하는 구조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견국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통 지정학에서 말하는 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는 중견국 외교의 저변에 강대국들이 형성하는 지정학적 권력구조가 밑그림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견국 외교의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중견국론이 거론되는 것도, 전통 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해류국가 간 세력전이의 가능성과 무관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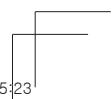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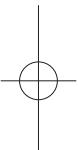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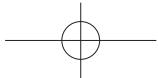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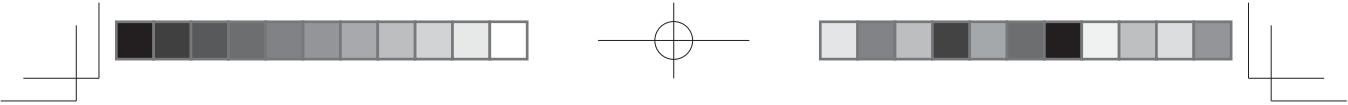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않다.⁶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에만 갇혀서는 21세기 한국이 당면한 중견국 외교의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중견국 외교의 영역을 전통 지정학의 영역과 별개로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 양자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복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와 글로벌 이슈구조가 겹치고, 전통안보 이슈와 신흥안보 이슈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복합구조를 활용하는 데에서 그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통 지정학의 시각뿐만 아니라 신지정학, 비판지정학, 탈지정학 등의 논의도 포괄하는 복합 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발상을 바탕으로 한다.

실제로 중견국 외교에서 주로 관건이 되는 이슈구조는 글로벌 차원에서 탈지정학적인 구조로서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차원의 지정학 구조와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경우 중견국의 중개 외교는 지정학 구조와 이슈구조가 서로 중첩되는 복합 구조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합 구조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견국 외교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자원권력과 특정 이슈 영역에서의 외교력 간의 편차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능력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자원권력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정학 구조의 경직성은 중견국에게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겠지만, 그러한 지정학 구조가 지역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구조와 중첩된다면, 그리하여 기존의 지역 구조가 지닌 경직성을 부분

6 최근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도전에 따라 지정학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정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지정학의 부활을 논한 작업으로는 Mead(2014), Ikenberry(2014), 지상현·콜린 프린트(2009) 등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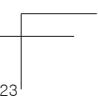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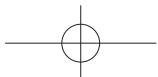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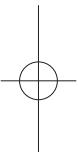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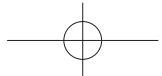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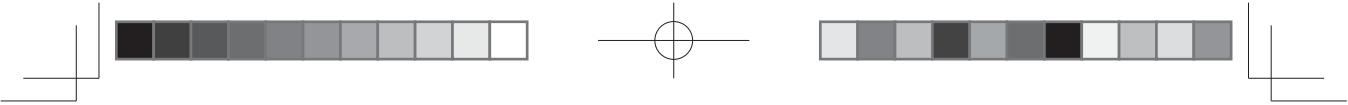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적으로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할 수도 있다. 중견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글로벌 연계성을 갖는 지역 차원의 이슈구조를 해결하는 경험들을 쌓음으로써 오히려 지정학 구조 차원의 고질적 난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적 위치론의 시각으로 보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어떠한 구조적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중견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즉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지만 당사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빈틈을 남보다 앞서 공략하는 것은 중견국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자신들이 아니면 단절되어 있을,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빠진 링크’, 즉 구조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네트워크의 작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덩치가 작은 나라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중견국의 외교적 역할은 그 나라가 지닌 속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에 기대어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공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얻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는 이 책의 글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는다. 향후 중견국 외교 연구과제 중의 하나는 세계질서의 다층적 구조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밝혀 내고, 거기로부터 중견국의 구조적 위치와 외교적 역할을 가늠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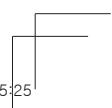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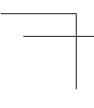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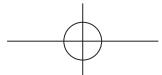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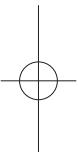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도에서 성공적으로 구조적 위치를 찾아 효과적으로 위치권력을 발휘한 중견국 외교의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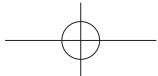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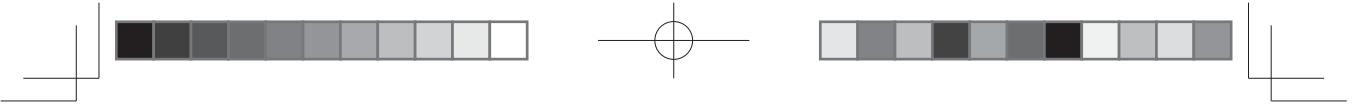
2. 열린 정체성과 국익론 및 국가모델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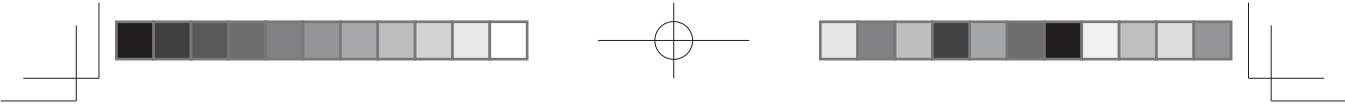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에서 구조적 위치라는 변수가 중요하고 중견국 외교의 성패가 복합 지정학의 시각에서 파악한 구조적 공백의 성공적인 공략 여부에 달려 있다지만, 여전히 행위자로서 그 중견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기서 문제시하는 것은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행태가 아니라 그 존재론적 성격이다.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이 상정하는 주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 행위자인가? 앞서 제시한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견국은 기존 제1세대나 제2세대와 같은 거래적(transactional) 외교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변환적(transformative) 외교를 펼치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제3세대 중견국은 서구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근대 국제정치의 이념형인 국민국가 모델보다는 좀 더 열린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을 지닌 탈위계적 국가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첫째,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은 중견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에

7 중견국 외교의 구체적 사례를 탐색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국내의 연구로는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수행한 중견국 외교 이니셔티브(Middle Power Diplomacy Initiative: MPDI) 워킹페이퍼 시리즈를 참조하라(S.B. Kim 2014a, 2014b; Y.W. Lee 2014; S.J. Kim 2014; S. Lee 2014; Koo 2014; Sohn 2014; Chun 2014; D.R. Le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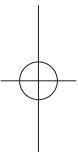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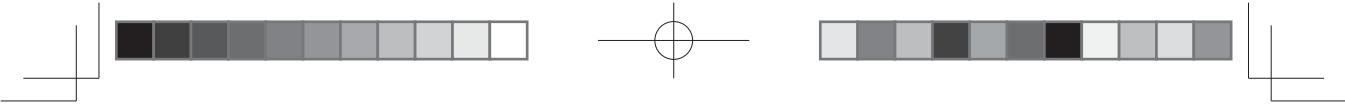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이러한 중견국 정체성의 개념화는 행태나 속성보다는 중견국의 구체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 책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제3세대 중견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재규정 작업도 필요하다. 중견국은 강대국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확장된 국가이익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약소국의 경우처럼 협소하게 규정된 국가이익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이익 개념의 재규정 문제는 중견국이 자리 잡은 구조적 위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한다. 최근 한국이 처한 중견국의 입장을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협소하게 정의된 국가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한국은 20세기 후반 근대화와 산업화의 추진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협소한 국가이익을 추구해 왔다. 대외적으로 개별국가 단위의 차원에서 본 국가이익의 추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개도국의 위상을 넘어서 중견국의 위치로, 그리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존의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을 수정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직면하였다. 중견국 한국은 종전과는 달리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안팎으로 확장된 외교 전략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3세대 중견국 외교의 국가이익은 어떠한 방법과 원칙 및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까? 현시점에서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닫힌 국익론’이 아닌 ‘열린 국익론’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더라도 하드 파워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스마트하게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소프트파워 외교의 외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의 국가이익만을 고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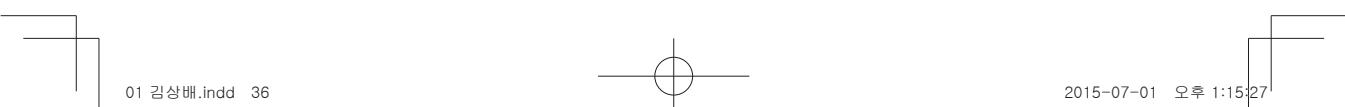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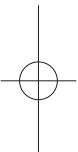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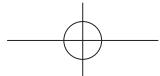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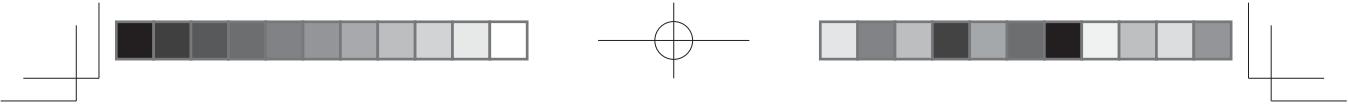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공동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외교, 즉 '함께 공(共)'의 공익(共益)외교가 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너와 나만 이익을 보자는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인류공동체의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외교, 즉 '공평할 공(公)'의 공익(公益)외교가 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국익론을 바탕으로 한 중견국 외교의 추진은 이를 감내할 새로운 국가모델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 중견국 외교의 추구는 많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의무부담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할 국내적 합의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면서 외교정책의 과정에 민간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기여할 여지가 많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 정치사회세력들의 압력은 정책형성과 수행에 촉진요인 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특정 이슈구조의 조건에서 어느 중견국에 기대되는 외교적 역할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특정 집단에 피해를 줄 가능성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외교는 약소국 외교의 실리주의와 이에 익숙한 기존 여론의 극복을 과제로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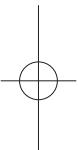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민들은 양보하고 기여하는 매력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상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대한 논의가 궁극적으로 중견국의 국가모델을 재조정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중견국 외교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나 국내적 합의의 도출뿐만 아니라 국내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국 내교(內交)도 매우 중요하다. 외교 전담부처와 기타 정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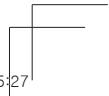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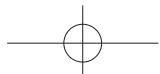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조체제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을 아우르는 중견국 외교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좀 더 넓게 보면 중견국 외교의 게임은 전통적 근대 국가 민국가의 게임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국가 모델, 즉 네트워크 국가 모델에 입각한 게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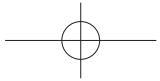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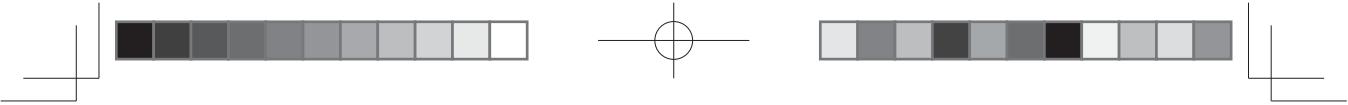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3.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복합적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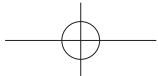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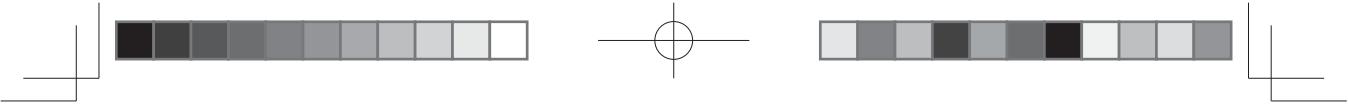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구조와 행위자의 복합구도하에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 의하면,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처방하는 바와 같이 자원권력을 증대하는 게임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견국 외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견국이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의 속성과 거기서 비롯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견국 외교 전략의 구체적 추진과정을 논하는 기본 잣대로서 네트워크 권력론에서 도출된 세 가지 능력, 즉 1)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지성, 2) 여타 중견국 또는 약소국들과 연대하는 집합지성, 3) 세계질서의 작동방식을 보완하는 설계지성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구조적 공백을 찾아내고 공략하는 위치지성을 바탕으로 한 중개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견국이 수행할 중개외교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칭적 중개’의 역할이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관계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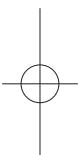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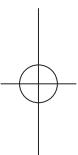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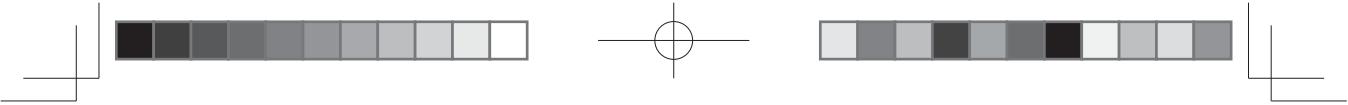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둘째, 제3세대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집합지성을 활용하는 연대외교의 모색이다.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구조 하에서 어느 중견국이라도 혼자 나서서 효과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중견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동지국가(*同志國家*, like-minded country)를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적 공백을 메우려는 중견국의 외교적 역할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길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행위자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다시 말해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의 확보에 있다. 강대국의 네트워크 전략이 혼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의 전략에 비유된다면, 중견국의 네트워크 전략이 혼히 여럿이 함께 벌집을 짓는 꿀벌들의 전략에 비유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전통 국제정치의 경우에는 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 차원에 의거해서 집합권력이 작동했다면, 최근에는 지식·문화·이념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설득하는 소프트파워의 게임이 중요한 집합권력의 메커니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제3세대 중견국 외교에서 대내외적으로 매력을 발산하는 공공외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꿀벌의 전략은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된 정부 간 협의체의 모습을 떠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글로벌 거버넌스의 장에서 동지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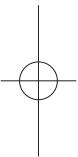
의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애플 운영체계 위에서도 윈도 운영체계를 구동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인 패럴렐 데스크톱(parallel desktop)의 기능에서 유추해서 명명하였다. 평행 중개는 다른 이름으로는 층위 간 중개(inter-layer brokerage) 또는 플랫폼 위에서의 중개(on the platform brokerage) 등으로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평행 중개는 중견국 외교의 방향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유용한 개념인데,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개념적 정교화와 경험적 사례의 발굴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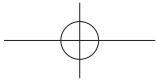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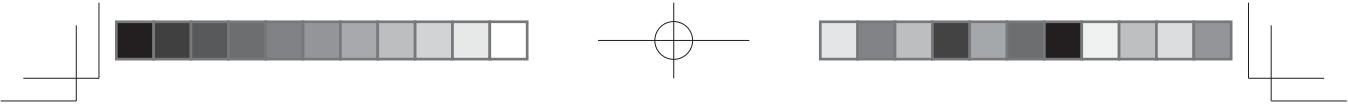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들의 연대외교로 나타난다. 동지국가 외교에서 그 연대 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공동의제의 발굴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제로 제기되는 분야인 개발협력,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등은 어느 한 국가 또는 소수 선진국들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초국가적 난제들이다. 최근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는 이들 분야에서 중견국들이 주도하는 협의의 장을 열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내걸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분야의 특징은 모두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들이라는 데 있다. 중견국 외교는 ‘구조적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슈구조하에서 중견국의 이익과 리더십을 반영한 ‘위치잡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3세대 중견국 외교가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모두의 중지(衆智)를 모으는 ‘지식 외교’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끝으로, 제3세대 중견국 외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중견국으로서 나름대로의 세계질서를 구상하는 설계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세대 중견국 외교가 상정하는 세계질서의 상(像)은 제1세대나 제2세대 중견국론이 상정하던 것과 같은 냉전과 탈냉전기의 세계질서와는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는 기존의 구상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정치 환경의 변환을 반영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맷그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세계질서 전체의 판세를 읽고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몽(中國夢)’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의 동상이몽 사이에서 한국은 ‘중견국의 꿈’을 제시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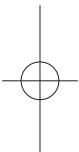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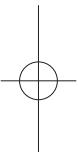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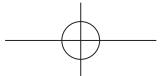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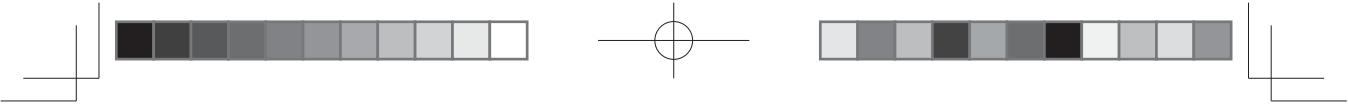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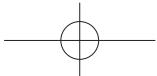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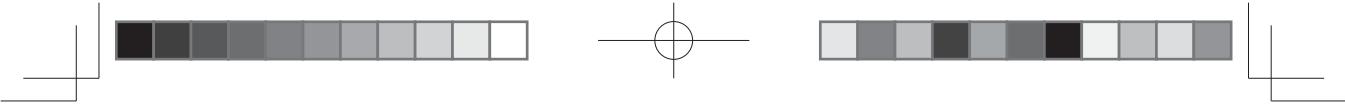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다시 말해 어떻게 세계질서 또는 동아시아 질서의 프레임을 짜야 주변 국가들이 동의할까? 여기서 관건은 한국이 과거의 약소국의 경험에 갇히지 않고 중견국의 미래를 짚어내는 꿈을 꿀 수 있느냐, 그래서 남의 꿈을 대신 꾸주는 것과도 같은 설득력을 얻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이는 ‘중견 국가지(middle power intelligence)’를 발휘하는 문제인 동시에 ‘중견국 상상력(middle power imagination)’을 실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견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제시되어야 할까? 현재 중견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세계질서 운영과정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대국을 대신해서 판 전체를 새로이 구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사실 중견국이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오히려 세계정치의 제도와 규범, 그리고 철학적 목표와 가치를 제공하는 설계지성을 발휘했던 측은 강대국들이었다. 그러나 중견국이 세계질서 전체를 설계할 수는 없더라도 주어진 플랫폼 위에 부가가치를 늘리는 하위 설계자 정도의 역할은 하는 것은 떠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견국의 경우에도 강대국들이 설계한 플랫폼 위에 적절한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원활히 작동하는 개선책과 보완책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프로그램의 설계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시스템의 상호작동성과 호환성을 증대시키는 메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는 전체 시스템의 규범적 가치와 정당성을 강화하는 보완적 역할은 담당할 수 있다(김상배 2014: 27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은 중견국의 속성을 가진 나라의 외교를 의미하는 ‘중견국의 외교(middle power's diplomacy)’나 제3의 입장의 국가들이 펼치는 외교를 의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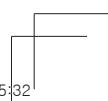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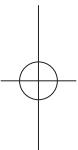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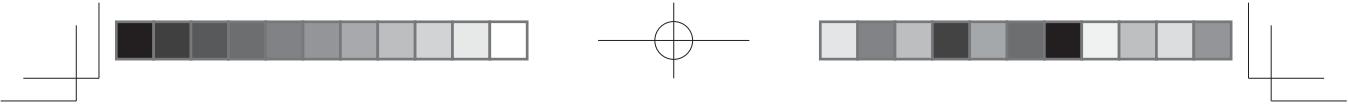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21세기 한국 외교를 모색하는 과정에는 패권외교가 아닌 평화외교를 하겠다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본질적으로 규범외교일 수밖에 없다.

V. 이 책의 구성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펼쳤다. 최근 중견국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염두에 두었지만, 이 책에서 골격을 제시한 제3세대 중견국 외교의 논의는 제1세대나 제2세대 중견국 외교론과는 달리 어느 특정 국가(군)의 외교 전략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이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이 어느 국가의 속성이나 행태라는 행위자 변수에 착안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처해 있는 구조적 조건과 거기서 그 국가가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행위자-구조의 복합 변수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은, 일종의 완제품으로서 어느 특정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론화를 시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이론화의 실마리들을 추출하는 일종의 조립식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런 점에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과 마찬가지로, 단일한 고정체를 실체 개념으로 파악하는 실증주의적 '단순 인식론'보다는, 다양한 복합체를 메타 개념으로 파악하는 다원주의적 '복합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다.⁹

9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인식론적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복합 인식론에 대해서는 김상배(2014)의 제3장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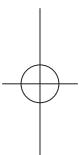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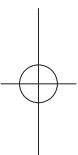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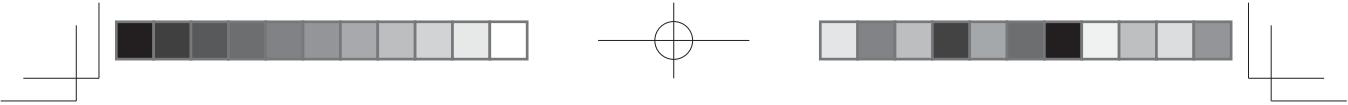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론적 요소들, 즉 구조적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위치권력과 중개권력, 21세기 중견국의 열린 정체성과 국익론 및 국가모델, 중견국의 실천전략으로서 네트워크 권력게임의 추구를 추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속성론의 관점에서는 중견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가들일지라도, 그 국가가 차지한 구조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모델과 네트워크 전략에서 주목을 끄는 사례들을 포함시켰다.¹⁰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살펴본 사례들은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제1세대 중견국으로부터 브라질, 남아공, 인도와 같은 제2세대 중견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 싱가포르, 한국 등과 같이 최근 중견국으로 거론되는 국가들까지 망라하였다. 게다가 일종의 국가연합(또는 정부협의체)으로서 아세안(ASEAN)도 중견국 외교를 펼치는 행위자(엄밀하게는 행위자-네트워크)로 보고 포함시켰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이 책은 중견국 외교의 사례를 국가별로 묶지 않고 중견국 외교의 특징이 드러난 이슈별로 나누어서 평화외교, 지역협력, 지식질서, 공공외교 등의 네 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평화외교와 중견국 외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벌어진 중견국 외교의 두 가지 사례를 다루었는데, 동티모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다국적군 파병을 주도한 호주의 중견국 외교와 아세안의 회원국인 캄보디아와 태국의 영토분쟁을 중재한 인도네시아의

10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제1세대 중견국 외교론을 넘어서려는 최근의 시도로는 Gilley and O'Neil eds. (2014)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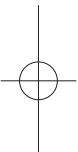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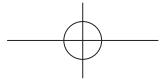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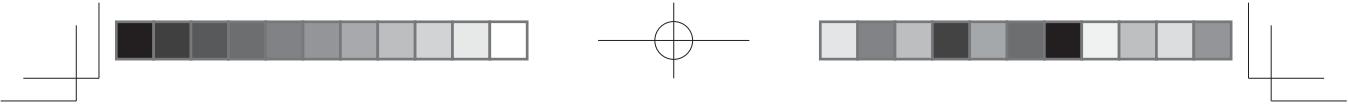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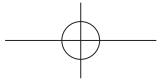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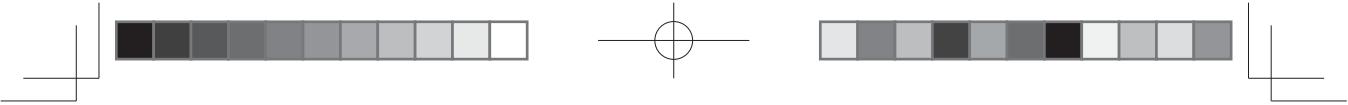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외교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제2장 ‘호주의 중견국 외교: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의 사례’는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위한 다국적군의 파병을 주도한 호주의 중견국 외교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요인을 분석했다. 2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호주가 미국이나 유엔을 대신해서 파병을 주도한 것은 구조와 행위자 및 과정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동티모르 사태 해결과 관련된 국제정치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호주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을 요구하는 일종의 구조적 공백이 생겨나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 중견국으로서 자기역할을 규정한 호주가 다양한 행위자들을 엮는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의 파병 주도 사례를 경제적 이익의 추구나 안보의 실현 등과 같은 단일한 요인으로 이해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외교를 중견국의 전통적인 행태적 특성으로 인식되어 온 선량한 국제 시민의식의 발로로 이해하는 경향에도 반론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속성이나 행태 변수에 대한 지나친 강조보다는, 특정 이슈구조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견국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제3장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캄보디아-태국의 영토분쟁 중재 사례’는 2008년 캄보디아와 태국 간에 발생한 무력분쟁에서 중재의 역할을 담당한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불개입·불간섭의 원칙을 중시하는 아세안의 역사에서 회원국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중재에 직접 나선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은 “캄보디아-태국 분쟁의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가 아닌 인도네시아가 분쟁 중재의 역할을 담당한 이유는 무엇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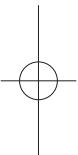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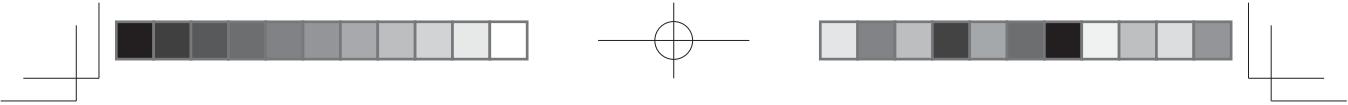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한 형태의 네트워크 국가)의 사례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역할 및 활동은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여 세(勢)를 모으고 새로운 설계구상을 제시하여 자기 주변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4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금융통화협력제도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소집자이고 중개자이며 설계자인 복합적인 지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추적하였다.

제5장 ‘싱가포르의 대테러 네트워크 외교: 아세안 안보공동체 구축과정을 중심으로’는 재난 관리모델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원용하여 2000년대 초 동남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에 대응해서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차원의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저마다 다른 정체성과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폭탄테러라는 ‘돌발적이고 의도적인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세안 방식(ASEAN Way)’으로 불리는 대외관계의 원칙은 지역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럼에도 아세안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법제도적 효력을 갖춘 아세안 안보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5장이 주목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싱가포르는 ‘폭탄’이라는 비인간 행위자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세안뿐만 아니라 역외의 주요 행위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전개하였다. 싱가포르는 초국가적 테러를 지역안보 이슈로 생점화하는 프레임 짜기에서 시작하여 기존 아세안 방식의 ‘블랙박스’를 열었으며, 마침내 새로운 대안적 네트워크를 짜는 ‘번역’의 4단계 전략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네트워크 외교 전략은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견국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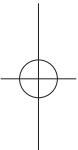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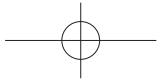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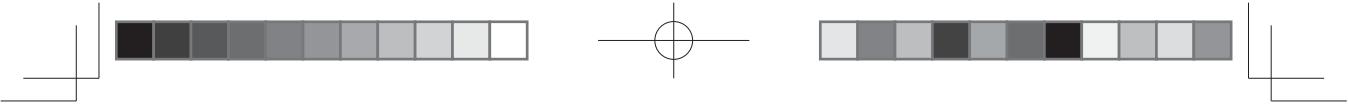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외교 전략에 주는 함의가 크다.

제6장 '싱가포르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 IMS-GT의 사례'는 접경 지역의 공동개발을 위한 소지역 협력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협력방식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된 IMS-GT(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싱가포르의 전략을 다루었다. 기존 연구는 싱가포르의 전략을 경제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경제적 보완성이 크지 않음에도 3국 간 다자협력구도가 형성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제6장은 역사적으로 경쟁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경제적 협력의 이점이 크지 않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소지역 삼각협력의 틀로 엮음으로써 역내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고 자국의 중심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싱가포르의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성과로 설명한다. 싱가포르는 IMS-GT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프레임을 제공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지역 구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강대국 간 관계를 중개했으며, 이러한 프레임을 설득하고 확산시켜 지역 차원의 중요한 틀로 자리 매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략은 IMS-GT의 사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외교 전략 전반에 두루 반영되었는데, 21세기 세계정치에서 관계구도상의 구조적 위치를 모색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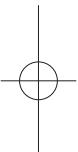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제3부 '지식질서와 중견국 외교'에서는 기술·정보·지식·커뮤니케이션(통칭하여 지식)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정치에서 중견국 외교의 양상을 보였던 세 나라의 사례, 즉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의 브라질, 에이즈를 둘러싼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브라질과 남아공 그리고 인도의 사례를 비교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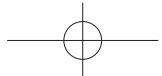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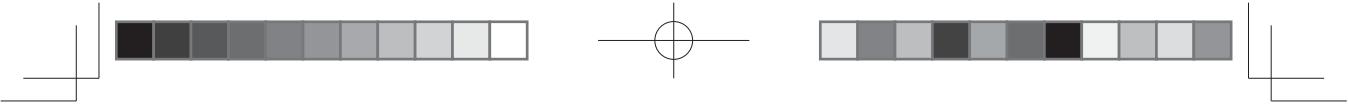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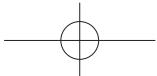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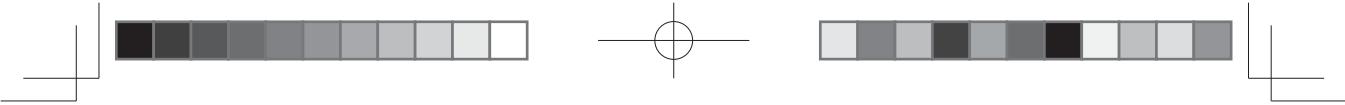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제7장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브라질의 중견국 외교: ICANN 개혁 논의에서 주권국가 담론의 형성’은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민간기구인 ICANN 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브라질이 담당한 역할을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제7장의 인식에 따르면, 브라질은 민간 행위자 주도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 진영과 정부 행위자 주도의 ‘정부간주의’를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및 아랍 국가 진영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견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외교는 룰라 행정부 이후 형성된 브라질의 외교적 관념 및 정체성에 바탕을 둔다. 브라질은 미국 주도하의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 최초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마르코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국내적 경험을 살려서 2014년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정부간 주의의 효율성을 널리 알리고 미국 주도로 형성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중견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제8장 ‘에이즈의 세계정치와 중견국 외교: 브라질과 남아공의 전략’은 에이즈라는 탈근대 보건안보의 위협에 대응한 브라질과 남아공의 중견국 외교 전략을 고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에이즈 피해국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에이즈 약물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와 공급 간에 발견되는 공백이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이행 의무와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를 신속히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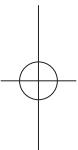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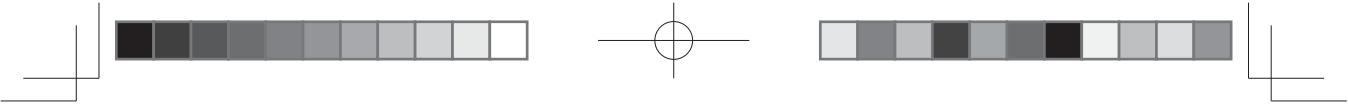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전략을 펼쳐왔다.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인도의 외교 전략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창출되는 관계구도와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파악된 네트워크상의 구조적 공백에서 비롯되는 위치를 활용하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의 양상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인도의 외교적 경향성은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제9장의 전망이다.

제4부 ‘중견국 정체성과 공공외교’에서는 중견국 정체성 형성의 대표적 사례로서 1940년대 전반의 캐나다의 타자경험과 자아인식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공공외교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교육외교 분야에서 나타난 중견국 외교의 사례로서 터키의 중앙아시아 공공외교와 한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살펴보았다.

제10장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변수: 캐나다의 사례’는 중견국 외교에서 정체성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중견국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어느 국가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중견국을 정의하거나 국가 행위자 외부의 구조적 변수들에 지나치게 주목함으로써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중견국의 능동적 주체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제10장의 인식이다. 캐나다의 사례는 중견국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고민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중견국의 외교적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0장은 캐나다가 중견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추적하였다. 1940년대 초중반 당시 강대국들이 형성한 국제정치의 관계구조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관계적 맥락에서 캐나다의 국내적 상황과 핵심관료들의 개인적 경험 및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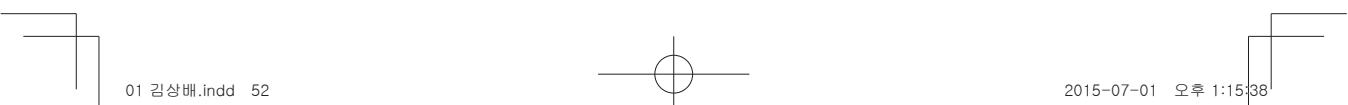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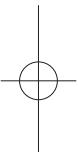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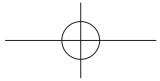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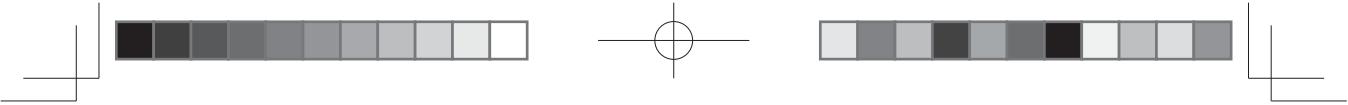


의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캐나다 내부에서 어떻게 외교이념과 정체성이 형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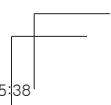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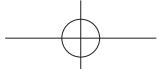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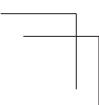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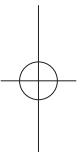
제11장 ‘터키의 중앙아시아 공공외교: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는 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발휘된 터키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 전략을 살펴보았다. 터키는 흔히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경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동서 문명의 교차로’로 표현된다. 그러나 경계국가로서 터키의 정체성은 자연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고안된 산물이자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했던 소프트파워의 자원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터키와 같은 중견국에게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구였던 것이다. 제11장은 이러한 터키의 ‘개발된 정체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데 활용되었음을 주목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으며, 그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전략의 기저에는 교육이 상대방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판단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 중인 교육외교 분야의 비국가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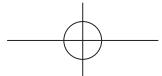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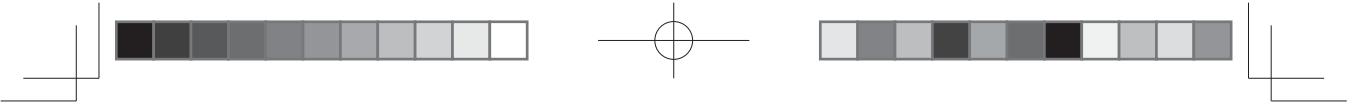
제12장 ‘한국의 공공외교: 유학생 유치정책의 사례’는 최근 새로이 유학생 유치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유학생 유치사업을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한국의 유학생 유치사업을 구조와 행위자 및 과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가해지는 구조적 압력에 대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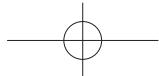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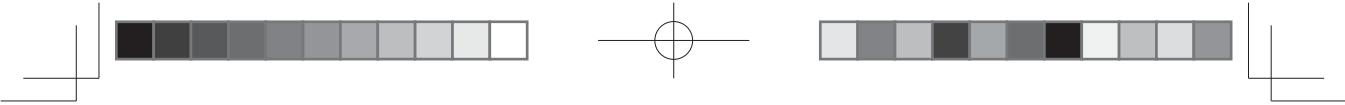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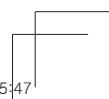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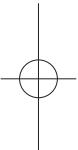
여 한국은 세계 표준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변수만으로 2000년대에 한국이 추진한 유학생 유치사업의 외교적 합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12장의 인식이다. 행위자 차원에서 한국은 유학생 교류를 통하여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매력을 발산하려고 했으며, 더 나아가 고등교육 국제화라는 세계 표준의 기반 위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취하는 제12장이 한국의 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유학생 유치사업의 성격은, 이 분야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구조적 위치를 활용하려는 중개지성과 집합지성 및 설계지성의 발로라기보다는 자국을 전체 네트워크의 허브 또는 중심으로 세우려는 자기중심적 전략에 가까웠다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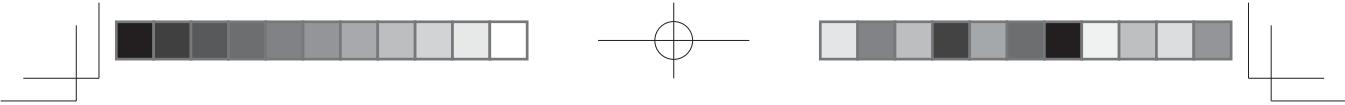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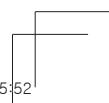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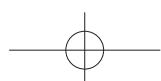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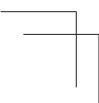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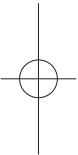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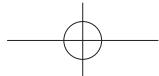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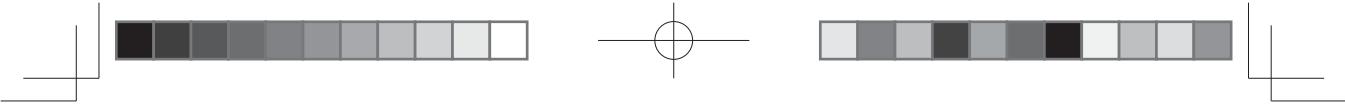
- Perspectives of the IBSA Dialogue Forum." GIGA Working Papers, 57.
- Foot, Rosemary. 2006. "Chinese Strategies in a US-hegemonic Global Order: Accommodating and Hedging." *International Affairs*, 82(1), pp.77-94.
- Gilley, Bruce and Andrew O'Neil (eds.). 2014. *Middle Powers and the Rise of China*.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ddard, Stacie E. 2009. "Brokering change: networks and entrepreneur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1(2), pp.249-281.
- Gordon, J. King. 1966. "Canada's Role as a Middle Power." *Contemporary Affairs*, 35. The 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Toronto.
- Hafner-Burton, Emilie M., Miles Kahler, and Alexander H. Montgomery. 2009. "Network Analysi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3, pp.559-592.
- Holbraad, Carsten. 1971. "The Role of Middle Powers." *Cooperation and Conflict*. CA: Sage Publication.
- Holmes, John W. 1966. "Is There a Future for Middlepowermanship?" In J. King Gordon (ed.). *Canada's Role as a Middle Power*. Toronto: Canad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pp.13-28.
- Hurrell, Andrew. 2006. "Hegemony, Liberalism and Global Order: What Space for Would-be Great Powers?" *International Affairs*, 82(1), pp.1-19.
- Ikenberry, G. John.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3(3), pp.80-90.
- Jordan, Eduard. 2003. "The Concept of a Middle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Distributing between Emerging and Traditional Middle Powers." *Politikon*, 30(2), pp.165-181.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1969. "Lilliputians's Dilemmas: Small 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23(2), pp.291-310.
- Kim, Sang Bae. 2014a. "Roles of Middle Power in East Asia: A Korean Perspective." EAI MPDI Working Paper No. 2.
- _____. 2014b. "The Inter-network Politics of Cyber Security and Middle Power Diplomacy: A Korean Perspective." EAI MPDI Working Paper No. 4.
- Kim, Sung Jin. 2014. "South Korea's Climate Change Diplomacy: 'Middle Power Diplomacy'." EAI MPDI Working Paper No. 5.
- Koo, Min Gyo. 2014. "East Asian Maritime Disputes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EAI MPDI Working Paper No.7.
- Lawler, Peter. 1997. "Scandinavian Exceptionalism and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5(4), pp.565-594.





- Lee, Dong Ryul. 2014. "China's Perception of and Strategy for the Middle Powers." EAI MPDI Working Paper No. 10.
- Lee, Seungjoo. 2014. "Multilayered World Order and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e Cas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EAI MPDI Working Paper No. 6.
- Lee, Yong Wook. 2014. "Korea's Strategy for Regional and Global Financial Governance: From Rule Taker to Rule Setter?." EAI MPDI Working Paper No. 3.
- Macfarlane, S. Neil. 2006. "The 'R' in BRICs: is Russia an Emerging Power?." *International Affairs*, 82(1), pp.41-57.
- Maoz, Zeev. 2010. *Networks of Nations: The Evolution, Structure, and Impact of International Networks, 1816-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es, David R. 1988. "Middle Powers under Regional Hegemony: To Challenge or Acquiesce in Hegemonic Enforce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 pp.453-471.
- McLin, Jon B. 1967. *Canada's Changing Defense Policy, 1957-1963: The Problems of a Middle Power in Allianc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Mead, Walter Russell.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93(3), pp.69-79.
- Modelska, George.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2), pp.214-235.
- Narlikar, Amrita. 2006. "Peculiar Chauvinism or Strategic Calculation? Explaining the Negotiating Strategy of a Rising India." *International Affairs*, 82(1), pp.59-76.
- Nexon, Daniel. 2009. *The Struggle for Power in Early Modern Europe: Religious Conflict, Dynamic Empires, and International Chan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ossal, Kim Richard. 2010. "'Middlepowerhood' and 'Middlepowermanship' in Canadian Foreign Policy," In Nikola Hynek and David Bosold (eds.). *Canad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Soft and Hard Strategies of a Middle Power*, pp.24-34.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Organski, A. F. K. and Jack Kugler. 1980. *The War Ledg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tte, Max. 2000. *A Rising Middle Power?: German Foreign Policy in Transformation, 1989-2000*. New York: St. Martin's Press.
- Ping, Jonathan H. 2005. *Middle Power Statecraft: Indonesia, Malaysia and the Asia-Pacific*. Hampshire and Burlington: Ashgate.
- Pratt, Cranford (ed.). 1990. *Middle Power Internationalism: The North-South Dimension*.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Rapkin, David and William Thompson. 2003. "Power Transition, Challenge and the (Re)Emergence of China." *International Interactions*, 29(4), pp.315-342.





- Ravenhill, John. 1998. "Cycles of Middle Power Activism: Constraint and Choice in Australian and Canadian Foreign Polici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2(3), pp.309-327.
- Ruvalcaba, Daniel. 2013. "Inside the BRIC: Analysis of the Semiperipheral Character of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Austral: Brazilian Journal of Strategy & International Relations*, 2(4), pp.141-173.
- Selcher, Wayne A. (ed.). 1981. *Brazil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Rise of a Middle Power*. Boulder, CO: Westview.
- Serrão, Olivier and Paul-Henri Bischoff. 2009. "Foreign Policy Ambiguity on the Part of an Emergent Middle Power: South African Foreign Policy through other Lenses." *Politikon: South African Journal of Political Studies*, 36(3), pp.363-380.
- Soares de Lima, Maria and Monica Hirst. 2006. "Brazil as an Intermediate State and Regional Power." *International Affairs*, 82(1), pp.21-40.
- Sohn, Yul. 2014. "The Role of South Korea in the MakKining of a Regional Trade Architecture: Convening, Bridging, and Designing FTA Networks." EAI MPDI Working Paper No. 8.
- Strydom, Hennie. 2007. "The Non-Aligned Movement and the Reform of International Relations." *Max Planck Yearbook of United Nations Law*, 11, pp.1-46.
- Ungerer, Carl. 2007. "The 'Middle Power' Concept in Australian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53(4), pp.538-551.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4), pp.387-415.
- _____. 1976. "Semi-peripheral Countries and the Contemporary World Crisis." *Theory and Society*, 3, pp.461-483.
- Williams, Kristen P., Steven E. Lobell, and Neal G. Jesse (eds.). 2012. *Beyond Great Powers and Hegemons: Why Secondary States Support, Follow, or Challenge*. Stanford University Press.

